

## G-2 체제에 대한 캄보디아의 대응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주 용 식\*

### I. 서론

세계질서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G-2 체제하에 재구성되어가고 있다. G-2 체제가 글로벌 수준에서만 국제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 각 지역의 지정학, 지정학적 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국가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중국에 근접한 국가들은 중국 급부상의 낙진 하에 G-2 역학관계 변화에 주의 깊게 대응하며 각자의 국가이익을 위해 외교의 묘수 (art of diplomacy)를 찾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중국과의 경제 상호의존성이 높고 중국이 주장하는 국가 핵심이익인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소재지다. 남중국해 분쟁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역내국가들간의 문제이나 이 지역에 이해관계가 높은 미국 역시 자유항해를 주장하면서 중국의 지역패권을 견제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의 중점 프로젝트인 운남성-라오스-태국-캄보디아를 남중국해 해상루트와 연결하는 중국의 종단경제회랑에 대해 미국을 대리한 일본이 인도차이나 반도를 가로지르는 횡단경제회랑으로 대응하고 있다. 더구나 동남아시아는 세계에서

---

\*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 ychoo1@cau.ac.kr

역동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다. 경제 성장률이 중국과 인도에 이어 가장 높고, 인구 증가율도 높다. 또한 남중국해는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동맥인 원유 수송로의 관문이다. 따라서 중국외, 미국, 일본 등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이해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 특히 G-2 갈등구조 속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생존을 확보하고, 지역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국익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해오고 있다. 본 연구는 G-2 갈등구조에 대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을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본 논문은 동남아시아 국제관계를 글로벌 구조의 하부구조로 보고 캄보디아의 외교정책을 G-2 강대국 정치(글로벌 수준의 구조), 아세안 지역주의 그리고 캄보디아 국익과 훈센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 4 수준에서 중층적으로 분석해 본다. 먼저, 이론적 관점에서 동남아시아 국제관계와 역내국가들의 대외정책에 대한 현실주의와 구성주의 관점을 비교 분석한 후, 아세안 지역구조가 과연 G-2 갈등구조 속에서 어떠한 실효성이 있는가를 고찰해 본다. 그리고 냉전 이후 캄보디아 대외정책의 변화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 II. 이론적 분석

### 1. 현실구성주의(realist constructivism) 관점

지난 10여년간 동남아시아 국제관계와 역내국가들의 대외정책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현실주의(realism)와 구성주의(constructivism) 간의 논쟁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Peou 2002; Busse 1999). 논쟁

의 핵심은 글로벌 수준에서의 강대국들의 힘의 정치와 지역수준에서의 아세안 규범체제와의 관계이다. 더 정확하게는 아세안의 역할과 실효성에 관한 논쟁으로 아세안의 규범구조와 힘의 정치 및 세력균형(balance of power)과의 관계, 아세안이 역내국가들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쟁이다. 현실주의자들은 아세안을 동남아시아 지역의 힘의 정치와 세력균형을 반영한 지역구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레이퍼(Leifer 1996: 59)는 아세안이 지역내 집단안보양상을 띠고 있고 일종의 외교공동체, 배태기에 있는 안보공동체라고 할 수 있지만 유럽연합과 같이 초국가적 권위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간 지역기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세안 공통의 가치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역내 구조를 만들어 내지 못했고, “아세안 지역 정체성 자체가 공유된 이해관계의 표출이었지, 공유된 정체성 자체는 아니다”는 주장이다(Leifer 1989: 144-148).

웨더비(Weatherbee 2015: 323-4)도 동남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주 행위자는 국가라고 주장한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아세안에 주권을 양도하거나, 자신들의 독립적인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위나 능력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아세안은 10개 회원국들과 독립적으로 나갈 정치적 힘이 없다고 주장한다. 전 아세안 사무총장 옹켝용(Ong Keng Yong)도 현실주의 시각에서 “아세안 회원국들은 자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할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아세안 회원권은 단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Weatherbee 2015; 21). 주권존중, 내정불간섭(non-interference)과 같은 아세안 규범과 원칙이 보여주듯 동남아시아 국제관계에서 국가 주권은 확고히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현실주의자들의 시각이다. 현실주의자들은 또한 아세안이 1967년 방콕선언에서 출범하여 2007년 아세안 헌장, 2015년 아세안 공동체로 확대되어 온 것은 아세안 회원국들의 외교정책의 결과로 본다. 아세안 회원국들이 동남아시아

국제관계의 변화와 국익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을 수용하면서 대외 정책을 구사하는 가운데 아세안이 발전하고 변화해왔다는 것이다. 아세안 설립은 냉전에 대한 대응이었고 최근 아세안의 재창출(reinvention)은 중국의 부상과 그에 대한 미국, 일본 등의 견제에 대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결과로 본다. 아세안 헌장에 따르면 아세안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열린, 투명한, 포용적 지역구도(regional architecture)’ 내에서 역외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요 동력(primary driving force)으로 작용하여 중심성(centrality)과 전향적 역할(proactive role)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강대국들 사이에서 아세안 내에 더 큰 자율성과 조정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현실주의자들은 아세안은 전통적인 양자외교를 강화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에 대한 증거로 현실주의자들은 남중국해 분쟁의 경우 강대국들 간, 특히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아세안 회원국들간의 이해관계가 각자의 국익에 따라 서로 달라지는 성향을 지적한다(Weatherbee 2015: 3).

구성주의는 아세안을 동남아시아 국제관계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지닌 주요 행위자로 본다. 아차리아(Acharya 2000: 180-4)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힘의 균형 정책을 펴온 것이 사실이지만, 힘의 정치를 국제관계의 근본이 아닌 ‘사회구성체(social construction)’의 하나로 정책 옵션으로 본다. 그리고 아세안과 같은 다자주의를 미국과의 양자동맹이나 힘의 균형 메카니즘에 대한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재로 본다. 다자주의가 불안정한 힘의 균형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힘의 정치를 초월해 집단안보체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질적으로 냉전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아세안을 미국 등 역외국가들과의 양자동맹에 대한 보완기재로 여겼다.<sup>1)</sup> 지금은

1)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 아시아학과 칼 잭슨(Karl Jackson) 교수는 방콕선언은 “미국이 떠나면 누가 동남아시아 5개국들을 보호해 줄 것인가?”하는 물음에서 비롯

아세안을 양자동맹의 대체기구는 아니지만 역외세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필요한 지역협력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메카니즘으로 여기고 있다. 아차리아(2014: 192)는 현재 아세안 지역안보공동체와 양자동맹이 수렴되어가고 상호 보완적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본다. 데니스 블레어(Dennis Blair) 전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코브라 골드(Cobra Gold)와 같은 역내 군사훈련을 좀 더 포괄적으로 만들기 위해 안보공동체(security community) 개념을 사용한 것을 그 실례로 든다. 다시 말하면,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는 지역안보협력 체제를 단순한 역외 양자동맹의 보완 기제가 아닌, 백퍼센트 신뢰할 수 없는 역외 동맹국들에 대한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 보는 성향이 높아지고 있다고 아차리아(2014: 191-195)는 주장한다.

아세안 규범체제는 중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황금률 3Rs인 자제(restraint, 내정불간섭), 존중(respect, 협의에 따른 결정), 책임(responsibility, 상대방 입장 고려)이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면, 불간섭(non-interference), 폭력 불사용(non-use of force), 지역 자율성(regional autonomy), 집단방위 회피(avoidance of collective defense), 아세안 방식(ASEAN-Way)은 행위규범을 나타낸다. 그리고 문제해결 방법인 아세안 방식으로 타협(compromise), 합의구축(consensus building), 모호성(ambiguity), 엄격한 상호주의 회피(avoidance of strict reciprocity), 법적구속력이 있는 의무거부(rejection of legally binding obligations) 등이 일종의 실행규범으로 되어 있다(Acharya 2014; 김석수 2016; 변창구 2009). 구성주의자들은 아세안 규범체제가 동남아시아 예외주의(Southeast Asian Exceptionalism)를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즉, 동북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질서를 유지해왔고, 남중국해와 같은 영토분쟁에도 대규모 군사적 대결은 없었으며, 냉전 이후 동남아시아는 아세안 주도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

되었다고 주장한다(인터뷰 2014.01.10).

(ARF, ASEAN Regional Forum),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등 다자지역협력 체제를 확대해나가며 지역안보를 관리하고 평화를 유지해오고 있어 가장 성공적인 개도국 지역주의로 본다. 그 예로 아세안 회원국들은 세력균형 원리에 따른 군비경쟁에 매몰되지 않았고, 싱가포르나 브루나이와 같은 작은 국가들이 더 이상 큰 국가의 위협에 취약하지만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He 2008: 490).

동남아시아 국제관계와 역내국가들의 대외관계를 1) 글로벌 구조, 특히 G-2 강대국정치, 2) 아세안 지역규범, 3) 역내국가들간의 이해관계 4) 국내위협 등 네 수준에서 조망해 볼 때, 현실주의와 구성주의 분석은 서로 중첩되고 보완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 분쟁의 경우 최근 분쟁 직접 당사자로서 반중 정책을 펴온 필리핀이 경제 이익을 기대하면서 중국에 친화적인 자세를 취한 것처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국익에 따라 힘의 정치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 반면에 아세안외무장관회의가 꾸준히 ‘남중국해당사자행동선언(DOC,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South China Sea)’ 준수와 ‘행동수칙(COC, the Code of Conduct)’ 구체화에 노력해 오듯이 분쟁해결을 위한 규범의 틀을 점증적으로 구축해오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태국 프레이비히아 사원 분쟁의 경우 양국간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민족주의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고는 현실주의와 구성주의를 절충한 현실구성주의(realist conservatism)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현실구성주의는 관념적, 규범적 요인이 국가행위의 결정 요인이라는 구성주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면서도 힘의 정치를 초월하거나 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Jackson and Nexon 2003). 바킨스(Barkins 2004: 338)는 구성주의는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현실

주의, 이상주의, 맑스주의와 같은 패러다임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구성주의는 현실주의와 대치되는 것이 아니며 두 이론적 접근법은 양립가능하다고 본다. 대표적 구성주의자 웬트(Wendt 1999: 92-138) 역시 국제정치에서 힘의 중심성을 강조했다. 다만, 힘을 물질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구성주의는 물질주의, 합리주의와는 대치되나, 규범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와 대립되는 것으로 보면 안되며, 오히려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상호 대치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구성주의의 입장이다(Barkins 2004).

물질적 힘의 분산(distribution of material capabilities)에 의한 역학관계로 국제정치를 분석하는 신현실주의(혹은 구조현실주의)와 관념적인 요인으로 구조를 분석하는 구성주의는 서로 분석의 대상과 초점이 틀리다. 그렇지만 고전현실주의와 구성주의는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국제시스템 수준이 아닌 리더 개개인과 국가 수준에서 대외정책을 분석하는 고전현실주의는 관념적, 규범적 요인이 국제관계에서 국가 행위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모겐쉴(Morgenthau 1946: 177-8)은 국가행위는 도덕과 윤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카(Carr 1964: 235, 12) 역시 도덕적 요인을 무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현실주의이라고 지적하였다. 모겐쉴과 카 모두 국제관계를 이해하는데 관념적, 규범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현실구성주의는 힘의 역학 구조가 규범의 변화를, 특정 규범이 역학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양식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따라서 규범 구조(normative structure), 정치도덕의 실행자(carriers of political morality) 그리고 힘의 사용(use of power) 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예를 들어, 비폭력 규범은 ‘우리(We-ness)’라는 정체성을 공유한 국가들 간에 구성되었고, 우리라는 정체성은 물리적 힘과 매

력, 정당성, 도덕적 권위와 같은 관념적 힘의 조합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보고, 규범의 실행자에 초점을 두고 관념과 힘 사이의 변증법적 역학관계를 분석한다(Adler et al. 1998). 현실구성주의 시각에서 본다면 아세안은 아래에서 분석하는 바와 같이 글로벌 힘의 정치가 동남아시아 역내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충격을 규범, 제도의 틀로 완화하고 때로는 안정화 시키는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힘의 정치와 세력균형 그리고 지역규범체제의 위협의 근원에 대해서 분석해 봐야한다. 월트(Walt 1987: 17-49)는 동맹이론을 제시하면서 국가가 힘의 역학관계가 아닌 위협에 대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동맹을 선택한다는 ‘위협균형(balance of threat)’을 제시한다. 위협은 상대방이 위협할 힘과 의사(intention)가 있다고 인식되었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위협균형론에서는 신현실주의가 주장하는 ‘힘의 분산’을 넘어 구성주의 관점에서 상대방이 적이나 친구냐 하는 정체성이 중요하다. 왜 1980년대 캄보디아와 태국은 중국, 미국과 연계하여 더 약한 베트남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려했는가? 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1990년대 미국 단극화 시대에 더 약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손을 잡았는가? 힘의 역학관계가 아닌 위협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었다. 위협균형이론은 위에서 언급한 네 번째 수준인 국내정치가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설명한다. 제3세계 현실주의는 동맹관계가 외부 위협에 대한 균형 전략일 뿐만 아니라 내부 위협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내외부 위협에 대해 전방위 균형전략(omnibalancing)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리더 자신의 이익이 국익에 우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David 1991). 정치적으로 불안한 필리핀이 친미 노선을 선택했던 것은 중국과 베트남이 아닌 국내 반란군에 대한 위협을 제압하기 위함이었다. 아세안의 경우 “내부



집단 안보(internal collective security)” 체제의 성향이 강한데 이는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이 권위주의 체제로 지도자들의 정통성이 완벽하지 않아 우선적으로 직면한 내부,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위협이 더 급박하므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국내위협에 취약하다(a common vulnerability to internal threats)(Leifer 1989: 1, 14). 아세안이 주권존중, 내정불간섭을 주요 규범으로 내세운 이유 중 하나는 각국 리더들에 대한 국내정치적 위협을 고려해서이다.

## 2. 복합균형(complex balancing)과 균형(balancing), 편승(bandwagoning), 헤징(hedging) 전략

브레진스키(Brzezinski 1997)는 ‘복합균형(complex balancing)’으로 중앙아시아 지정학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복합균형이란 기존의 지정학적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강대국들의 힘과 이해의 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지정학적 요충지(geopolitical pivot)에 위치한 역내국가들의 안보이익을 보장하여 지역안정을 이루고 국가 간 협력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말한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복합균형은 강대국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구조 속에서 역내국가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종연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아세안이라는 규범적 틀을 통해 미중 간의 힘이 정치의 충격을 완화 시켜 지역 복합균형을 안정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세안의 전략은 강대국들의 영향력, 지배력(dominance)을 희석시키고 아세안 규범인 지역 자율성(regional autonomy)를 지켜가기 위해 지역 다자주의에 여러 강대국들을 개입 시키는 것이다(co-engagement)(Acharya 2014). 역외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집단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외교 이익단체(diplomatic caucus)’ 혹은 ‘협력의 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헤(He 2008)는 아세안의 역외국가 특히 강대국들에 대한 대응전략을 현실구성주의 시각에서 일종의 ‘연성균형(soft balancing)인 ‘제도균형(institutional balancing)’으로 설명하고 있다.<sup>2)</sup> 제도균형은 다자협력체제나 지역기구를 개시, 활용, 주도(initiating, utilizing, dominating)하여 압력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ARF는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 역외국가들을 다자체제의 틀로 유입하여 힘의 정치의 여파를 완화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G-2 체제에 대해 각기 다른 전략을 제시해왔다. 1992년 미군의 필리핀 철수가 가시화되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지속적인 동남아시아 지역안보 개입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1992년 제4차 아세안정상회의 성명서는 미국을 표적으로 역외 정치안보 대화를 강화해야한다고 발표하였다.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를 자국의 영토로 규정하는 법을 통과시키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아세안확대외무부장관회의(ASEAN PMC, ASEAN Post-Foreign Ministerial Conference)’에서 중국의 단호함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지역안보에 미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했다. 1993년 ASEAN PMC는 미국의 지속적 개입으로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치 안보 이슈를 다루기 위한 ARF를 발족하기로 하고, 1994년 방콕에서 제1차 ARF를 개최한다. 미국을 유인하기 위해 ARF는 동남아시아 안보외에 미국과 중국의 관심 사항들도 이슈를 다루고 있다. 1995년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의 방미로 인한 미중간의 긴장고조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하였고, 9.11 사태 이후 미국의 대테러전에 유용

2) 현실주의나 구성주의 하나의 이론만으로는 제도균형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다양한 힘의 원천과 세력균형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현실구성주의 시각에서는 설명이 가능하다. 균형전략은 현실주의, 제도는 구성주의 개념이다.

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은 다자체제 안으로 중국을 유입하면서 규범과 규칙으로 중국의 행위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1995년 미스치프 환초 (Mischief Reef) 사건 당시 아세안 회원국들은 일제히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중국의 무력 점령을 금지한다며 필리핀을 지지하였다. 아세안 회원국들의 단합된 행동에 중국은 처음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다자협약에 동의하였다. 1995년에는 중국은 ‘아세안-중국 외교의 장’인 정례고위급회담(SOC, Senior Official Conference) 개최에 찬성하였다. 2002년에는 DOC에 서명하였다. 따라서 명목적으로 중국은 다자틀 내에서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게 된 것이다. 2003년에는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에 가입함으로써 동남아시아에서 공격적 행위를 하지 않기로 법적으로 동의하였다.

아세안 현장이 주창하는 ‘아세안 중심성’은 아세안이 동남아시아 국제관계에 있어서 주요 동력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다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역학관계가 불리한 역외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정치적으로 주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그룹으로 ARF,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EAS, 아세안 + 3 등 다수의 다자체제를 창출하는 것을 그 실질적 의미로 볼 수 있다(Weatherbee 2015: 331). 이와 같은 측면에서 아세안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 국제사회에서 아세안 회원국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는 역할이다. 그렇지만 국익과 리더의 이해관계에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역외국가들과의 양자관계를 바탕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G-2 체제와 같은 강대국 힘의 정치에 대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균형, 편승, 헤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균형전략은 부상하는 국가가 패권(hegemony) 혹은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는 수정주의(revisionist

state)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전략으로, 현재의 균형상태를 유지하는 현상유지(status quo) 전략이다. 편승은 위협국가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그 국가와 협력하는 경우 (Walt 1985)와 부상하는 국가가 승산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익을 취하기 위해 협력하는 ‘이익편승(bandwagoning for profits)’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해 볼 수 있다 (Schweller 1987). 헤징은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해 한 가지 이상의 정책 옵션을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헤징은 균형전략을 포함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중요한 차이점은 헤징은 미래위협에 대한 것이고 균형은 현재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Roy 2005). 균형과 편승이 다른 강대국과의 관계를 희생해 가면서 특정 강대국을 편들거나, 특정 정책을 선택하는 것에 비해 헤징은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간적인 입장을 확보하여 가능한 모든 정책옵션을 유지하는 것이다(Goh 2007: 825). 특정 강대국과의 한정된 협력관계, 다수의 정책,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간지대 확보(cultivation of middle position)가 헤징의 필수조건이다. 특정 강대국을 지지(alignment)하되 그 협력의 범위와 정도를 제한하여 다른 강대국과 비공식적인 정치, 안보, 경제 협력이 기존 협력국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여 자국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미래의 위협에 대한 보험을 확보하는 것이 헤징전략이다.

로이(Roy 2005)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을 고강도(high-intensity) 균형/저강도(low-intensity) 균형/헤징/개입/편승으로 나누고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저강도 균형전략을 태국, 미얀마는 헤징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피오리(Fiori et al. 2013) 역시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미얀마는 헤징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그 원인을 미중 간의 힘의 역학관계의 변화, 즉 글로벌 역학구조가 동남아시아 하부구조로의 투영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 2000년 미얀마의 최대 해외수출

시장은 태국, 미국이었으나, 2015년 중국이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투자측면에서도 중국이 아직 최대 규모이다(ASEAN 2017). 하지만 2013년 미얀마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가장 대규모 미국 주도 군사작전인 ‘코브라 골드 훈련’에도 참여하였고, 특히 2014년 미얀마에서 개최된 아세안정상회의 의장성명서는 남중국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미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 convention on the Law of Sea)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해결을 주장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정치적으로는 미국, 서방과 근교하면서 헤징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퀴크(Kuik 2008)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모두 헤징전략을 택하고 있으나, 중국부상에 대해 중국과 스포트라이트 군도를 놓고 갈등관계에 있는 말레이시아가 그렇지 않은 싱가포르 보다 더 유연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그 원인을 국내정치요인인 체제정당화(regime legitimation)에서 찾는다. 각국의 지도자와 엘리트 그룹은 자신들의 통치에 위협이 되는 정치, 경제, 안보 위협을 줄이고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정책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강대국들간의 힘의 역학관계 변화로 인한 기회와 도전을 자신들의 통치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데 이때 통치기반이 되는 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위협 대비 이익으로 분석하여 부상국가에 대한 전략을 세운다고 주장한다. 퀴크는 주권보호, 자유민주주의 규범, 경제번영, 안보, 내부통합, 주권수호 등 일반적인 국가 핵심이익외에도 취약성 해결(coping with vulnerability)이나 종족간 균형(ethnic balance)과 같이 특정국가에 고유한 사안들이 통치기반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Kuik 2008: 161-162). 퀴크는 헤징을 <표 1>과 같이 균형과 편승 사이에 놓인 스펙트럼으로 분석한다. 헤징의 핵심을 이익쟁취와 위협대처를 서로 상쇄하는 전략들의 포트폴리오로 본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모두 중국의 헤게모니는 부정

하면서(지배부정) 미국과의 공식, 비공식 정치, 군사, 경제관계를 유지하여 중국에 대한 간접적 균형전략으로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의 양자관계 혹은 아세안 제도균형을 통해 중국을 아세안 지역체제에 유입하여(구속개입)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경제실용주의). 말레이시아는 정치 파트너십, 중국의 이익 존중과 같은 제한편승을 헤징전략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투자 확대를 비롯한 중국부상에 따른 경제적 기회는 말레이인들의 지배적 위치 강화, 경제성장, 선거승리, 주권수호, 국제적 입지 제고 등 엘리트들의 통치기반을 확고히 하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엘리트들의 선거기반 확충을 위해 국민다수인 말레이인들의 복지증진과 비말레이인들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경제성장이 필수불가하다. 따라서 2005년 말레이시아는 중국과 방위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주권수호와 말레이인과 화교간의 갈등이라는 취약성으로 인해 완전한 편승전략을 택하기는 어렵다. 싱가포르의 경우 ‘소국’이라는 취약성 때문에 경제 상호의존성 증진, 군비증강과 동맹결속, 지역 세력균형이라는 세 축의 전략을 추진해 왔다. 특히, 남중국해의 자유항해는 싱가포르의 경제 역동성과 국가주권에 매우 중요하며,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패권은 항상 싱가포르의 국가핵심이익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간접균형을 위해 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하였다. 싱가포르는 동남아 국가들 중 최초로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개설하고 외교관계로 확대해왔으나, 전 국민의 76% 이상이 중국계인 관계로 ‘세 번째 중국,’ ‘중국의 동남아시아 전산’이라는 국제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정치군사적 관계는 자제해오고 있다 (Suryadinata 1985: 81).

<표 1> 중국 부상에 대한 동남아시아 4개국들의 헤징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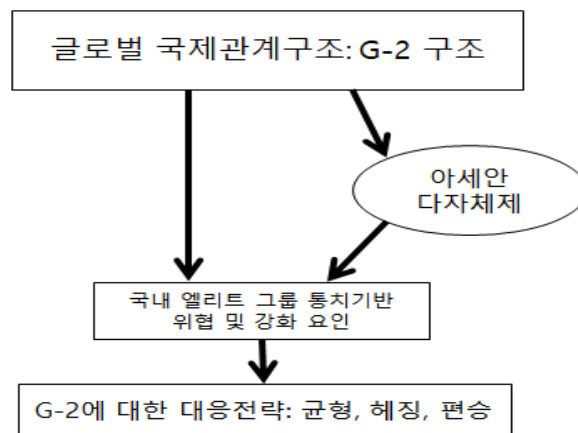
국가	균형	헤징					편승
		위협대비 옵션		이익쟁취 옵션			
		간접균형	지배부정	경제 실용주의	구속개입	제한편승	
특정	중국위협에 대한 미국과 군사동맹 강화	중국부상에 따른 불특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미국과 군사협력 강화/ 군사력 증강	헤게모니 출현 부정/타강 대국유입 및 정치균형/ 아세안 집단행위	무역, 투자를 통한 경제이익 극대화	의사소통확대/발언기 회중대/ 중국 정책선택에 영향 및 관계제도화	정치파트너십/ 중국 이익 자발적 존중/	생존을 위한 중국과 군사동맹
말레이시아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싱가포르		선택	선택	선택	선택		
태국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인도네시아		선택	선택	선택	부분선택		
		중국의 힘 거부	←—————	중립	—————→		중국의 힘 수용

출처: 퀴크(2008)

본 논고는 위에서 논한 동남아시아 국제관계 구조와 역내국가들의 대외정책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근거하여 G-2 체제에 대한 캄보디아 대외정책을 <그림 1>과 같이 분석한다. 우선, 현실구성주의 시각에서 동남아시아 국제관계 구조를 글로벌 구조의 투영으로 보고, G-2 구조의 투영 경로를 G-2와 캄보디아 양자 간의 직접경로와 아세안 다자체제를 통한 완충경로로 양분한다. 두 경로를 통해 G-2가 혼센의 통치기반과 체제정당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 본 후 캄보디아의 G-2에 대한 헤징전략을 분석해 본다. 직접경로는 G-2의 역학관계 변화라는 현실주의 요인과 규범과 정체성이라는 구성주의 요인이 혼센의 통치기반에 위협 혹은 강화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본다. 완충경로는 아세안의 제도균형이 혼센의 통치기반과 체제정당성에 주는 G-2의 영향을 완충시키는 작용을 하는지를 살펴

본다.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 탈냉전 이후로 파리평화협정, 훈센의 무력 쿠데타를 포함한 1998년까지와 그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그림 1> 연구분석 틀



### Ⅲ. G-2에 대한 캄보디아의 대응전략 분석

#### 1. 파리평화협정, 유엔과도정부(UNTAC, UN Transitional Authority in Cambodia)와 훈센(Hun Sen)의 쿠데타: 1989 - 1998년

1979년 베트남은 크메르 루즈가 집권한 캄보디아를 함락시키고 괴뢰정부인 캄푸치아인민공화국(PRK, People's Republic of Kampuchea)을 수립한다. 수반은 헝삼림(Heng Samrin)이었다. 당시 국제환경은 글로벌 구조로 미소 냉전과 중소갈등, 지역구조로 미중, 미-아세안 관계 개선으로 분석할 수 있다. 크메르 루즈는 친중 정책



을 취하고 있었던 반면, PRK는 소련과의 외교관계를 복원하고 베트남 군대 주둔을 정당화하기 위해 소련과 평화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였다(이윤범 2012: 103).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은 중국을 자극하였다. 베이징은 1979년 2월 미국의 묵시적 지원 하에 북베트남을 침공하였고, 크메르 루즈를 지원하는 중국-미국-태국이 캄보디아 베트남군을 포위하는 형상이 되었다(Chandler 2007: 278).

베트남 점령 하에 수천 명의 캄보디아 지식인들이 태국으로 망명하거나 피난처를 찾았고, 난민수용소에서는 반베트남 정치세력이 형성되었다. 전 캄보디아 총리 손산(Son Sann)이 이끄는 세력이 가장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으나, 반베트남 외세인 미국, 중국, 태국의 지지를 받지 못해 실효성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지는 못했다. 더구나 크메르 루즈가 미국과 중국의 후원으로 유엔대표부를 장악하고 있었고 싱가포르, 태국도 반베트남, 친중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들은 태국국경 근처에 있는 크메르 루즈 잔군을 지원했다. 하지만 크메르 루즈의 대학살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자, 중국을 비롯한 반베트남 국가들은 망명중인 시아누크 국왕에게 정치 재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1981년 반베트남 국가들의 정치적 조작과 압력에 의해 시아누크, 손산, 크메르 루즈는 정치연합을 선언하였고, 다음해 민주캄푸치아연립정부(CGDK, Coalition Government of Democratic Kampuchea)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여 캄보디아 유엔대표부로 인정받게 된다. 3개 정치세력으로 구성된 망명정부인 CGDK는 사실 상 크메르 루즈가 장악하고 있었다(Chandler 2007: 284). 한편, 훈센이 이끄는 친베트남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국(SOC, State of Cambodia)을 수립하고 점진적으로 자력통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었다. 1983년까지 베트남은 약 3만 여명의 PRK 군대를 양성했다. 베트남 철수 이후를 대비해서였다. 또한 철수 직전 불교를 국교화한 개헌, 사형제 폐지, 토지 상속, 국가와 국기개정을 포함한 개혁을 단

행했다. 행정조직도 자리잡기 시작하여 베트남 점령 후 지방행정구역까지 관료조직이 정비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개혁과 변화는 국가 안정을 가져오기 시작하였고 1985년부터 총리로 등극한 훈센의 통치기반을 강화시켰다(Gottesman 2003: 316-335). 훈센은 체제 정당성 강화를 위해 베트남 정부에 편승하여 생존을 확보하고 통치기반을 다졌다. 그러나 냉전종식이라는 글로벌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베트남 군 철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였고 중국과 서방세계에 대한 제한편승으로 체제정통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반면에 크메르 루즈는 중국과 미국에 편승하여 국제사회의 인정을 확보하고 베트남을 균형전략으로 견제하고, 궁극적으로는 격퇴(roll back)시켜 정권을 재탈환하려고 하였다.

크메르 루즈의 대학살이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아 1990년 미국부장관 베이커(James Baker)는 CGDK 유엔대표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고, 중국에게 크메르 루즈에 대한 지원을 감축할 것을 권장했다. 1991년 7월 그는 크메르 루즈의 권좌로의 회귀를 반대하고 훈센, 베트남과 대화를 개시하면서 크메르 루즈를 포함한 CGDK 세력의 캄보디아 유엔대표부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US Embassy 2010: 46). 미국의 리더십 하에 유엔은 시아누크를 수장으로 캄보디아최고민족협의체(SNC, Cambodia Supreme National Council)를 구성하였고, 1991년 11월에는 캄보디아 내전문제 해결을 위한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유엔소속 18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캄보디아 측에서는 훈센파와 CGDK 세 정파가 참여하였다. 이론적으로 파리협정의 목적은 캄보디아 각 정파에 대한 외세의 후원 중단과 캄보디아 비동맹화였다. 하지만 당시 국제사회는 미국 헤게모니의 단극화 시대였다. 훈센은 미국이 반크메르 루즈 정책으로 전환하고 SOC를 수용하자 자신의 통치기반을 다지기 위해 헤징전략으로 미국에 편승하였다. SNC에 적극 참여하였고, 캄푸

치아인민혁명당은 파리평화협정에 참여하기 위해 사회주의노선을 포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용을 선언하면서 당명을 캄보디아인민당(CPP, Cambodia People's Party)으로 개칭했다. 탈냉전 글로벌 질서의 변화를 체제정당화로 활용하려는 이미지 메이킹이었다. 반면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상실하기 시작한 크메르 루즈 세력은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1991년 11월 미국은 프놈펜에 연락 사무소를 개설하면서 경제제재를 종결하고 원조를 재개하였다. 1993년에는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정상화되었다.

파리평화협정의 주요 의제는 1993년 총선거 실시와 UNTAC 설치였다. 그리고 캄보디아 안정화와 총선거 실시를 위해 22,000여 명의 유엔평화유지군이 파견되었다. 1993년 5월 크메르 루즈가 거부하는 가운데 실시된 총선거에서 어느 정파도 압승하지 못한 채 시아누크의 왕당파(FUNCINPEC, United National Front for an Independent, Neutral, Peaceful and Cooperative Cambodia)가 45.4%로 총 120석 중 58석을, 훈센의 CPP가 38.2%로 51석을 차지했다. 따라서 양당은 연립정부를 구성하였고 시아누크의 아들 라나리드(Norodom Ranariddh)가 제1총리, 훈센이 제2총리로 등극하였다. 그렇지만 베트남 점령기 군부와 행정조직을 물려받은 훈센이 사실 상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이윤범 2012: 105-107). 결국 1998년 총선을 겨냥한 권력구조 개편과 크메르 루즈 문제에 대한 해결을 둘러싸고 1997년 7월 훈센은 무력 쿠데타를 일으켜 라나리드를 축출하였다.<sup>3)</sup> 1998년 외국감시인단의 감시 하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총 122석 중 CPP가 64석, FUNCINPEC이 43석, 삼랑시당(SRP, Sam Rainsy Party)이 15석을 확보하였다. 캄보디아 헌법에는 3분의 2석을 차지한 다수당

3) 훈센은 한때 자신이 속했던 크메르 루즈에 대해 포용적이었으나, 크메르 루즈는 훈센을 배신자로 비난했다. FUNCINPEC이 별도로 크메르 루즈의 지도자 타목(Ta Mok)과 협상을 하려하자 훈센은 자신의 입지가 어려워질 것을 예상해 쿠데타를 일으켰다(Chandler 2007: 290).

만이 단독정부를 수립하게 되어있어 다시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했다. 훈센이 단독 총리가 되고 복귀한 라나리드가 국회의장이 되었다(이윤범 2012: 107-108).

1997년 쿠데타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경제원조를 중단했고, 해외투자 역시 급감하였다.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도 연기되었다. 훈센은 부랑자로 낙인찍혔다. 하지만 총선거 이후 국제사회와의 관계는 재개되었고 특히 1999년 아세안 가입 이후 캄보디아는 독립 이후 회피해온 동남아시아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캄보디아 내전 동안 아세안은 태국으로의 베트남 공산주의 확산을 우려해 크메르 루즈를 지지했다.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즉시 아세안은 유엔안보리에 전쟁중식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였지만 소련에 의해 거부되었다. 하지만 1979년 유엔총회는 아세안의 제안을 수용해 PRK의 유엔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세안은 PRK를 베트남의 괴뢰정부로 규정했고, 베트남 침공을 내정불간섭으로 규탄하면서 유엔헌장의 원칙에 호소하였다(Johns 2007: 529). 1982년에는 캄푸치아에 관한 유엔국제회의(ICK, U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ampuchea)가 설치되어 정전, 유엔 감시하 베트남군 철수, 총선거와 캄보디아 독립정부 수립을 포함한 아세안의 제안을 지지하였다. 아세안은 또한 태국 국경지대로 퇴각한 크메르 루즈에 대한 유엔 지원을 요청했고, 크메르 루즈에게 안식처를 제공하였으며 캄보디아인들의 PRK에 대한 반감을 상징하는 캄보디아 난민촌 지원을 지지했다. 아세안은 베트남군에 저항하기 위해 크메르 루즈의 군사력은 필요했으나, 크메르 루즈가 정권을 재탈환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1982년 아세안은 크메르 루즈의 캄보디아 유엔대표성은 지지했지만, 크메르 루즈를 CGDK로 끌어들이 리더십을 교체하고 공산주의 대신 민족주의 연합정부를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1989년 중소간에 캄보디아 민족화합, 국제사회 감시하 총선거에 합의하면서 양국은 캄보디아 내정으로 부터 멀어졌다. 유엔안보리 또한 아세안이 애당초 제안한 캄보디아 내전에 대한 외세 불간섭을 포함한 포괄적 해결에 합의하였다(Weatherbee 2015: 78-85). 캄보디아 내전 동안 아세안은 동남아시아에 대한 냉전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아세안은 훈센을 의도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유엔을 끌어드려 강대국 정치를 희석시킴으로써 내전 이후 훈센정권이 유지되는 결과를 낳았다. 1997년 훈센 쿠데타가 일어나자 아세안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 캄보디아 내정에 개입한다. 훈센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은 소위 ‘트로이카(troika)’를 구성하고 훈센과 미국간 조정 역할을 하였다. 트로이카는 1998년 총선거가 끝날 때까지 훈센과 라나리드의 대리인이 정부를 이끄는 ‘관리정부(caretaker government)’를 제안하였으나 이미 정적이 된 훈센과 라나리드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아세안의 개입은 CPP가 승리한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라나리드와 삼랑시의 입지를 강화시켰고 캄보디아 정쟁을 심화시켰다. 결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지지를 업고 아세안은 캄보디아 정파들 간에 연립정부 수립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냈다. 미국의 압력에 따른 아세안 개입은 훈센 체제의 정당성을 공격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아세안의 개입으로 훈센은 국제사회에서 체제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미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Johns 2007).

## 2. 1998년 이후: G-2 체제에 대한 캄보디아의 대응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부터 동남아시아 국제관계는 G-2라는 미중간의 힘의 정치가 본격적으로 투영되기 시작했다. 특히 미 오바마 행정부가 ‘아

시아로의 회귀 내지 재균형' 정책으로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패권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미중간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G-2 경쟁 구조에 대해 캄보디아는 헤징전략을 취하면서 미국의 위협에 대해 중국에 대한 제한평승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본장에서는 미중간의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른 캄보디아의 헤징전략을 현실구성주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가치, 규범과 경제 상호의존성이 훈센의 체제정당성을 약화 혹은 강화시키면서 캄보디아의 G-2 관계를 규정해오고 있다. 중국과 캄보디아는 경제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규범적 차원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수렴되어 온 반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우는 미국과는 규범적 이해관계가 점점 더 멀어져 왔다. 특히, 미국의 가치외교는 훈센의 통치기반에 결정적 타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캄보디아는 중국에 대한 경제실용주의, 제한평승으로 헤징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 (1) 캄보디아와 미국과의 관계

과리평화협상에서 미국은 크메르 루즈에 반대하여 간접적으로 훈센에게 유리한 외적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1997년 훈센이 무력 쿠데타를 일으키자 경제제재, 원조중단, 훈센정부의 유엔대표성 반대 등 반훈센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후 캄보디아와 미국은 긴장과 갈등의 시기를 겪는다. 주요 원인은 가치와 규범이었다. 냉전 이후 미국은 시민권 증진, 시민사회 성장, 선거감시 등을 통한 민주주의 강화와 인권신장을 개도국 외교의 주요 목표로 삼았다. 미국의 민주주의/인권외교는 캄보디아에도 예외없이 적용되었다. 주 캄보디아 미국대사 무소멜리(Joseph Mussomeli 2010)는 모든 국가가 자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조건없는 원조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경우 “조건은 민주주의와 정의 (justice)”라고 미국 외교의 목적을 명시하였다. 1997년 쿠데타 이후 미 의회는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를 금

지하면서 인권유린과 정치자유 억압을 그 이유로 들었다. 원조가 재개되었지만 캄보디아 소재 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원조 수혜 단체들은 훈센정부의 인권유린과 정치억압을 비난하였다. 더구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개도국들에게 구제금융 및 원조조건으로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SAP,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을 강요하였다. SAP은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핵심이다.

미국은 UNTAC 이후 치러진 모든 캄보디아 선거를 부정선거로 비난했다. 대표적 민주주의 진흥 기관인 국제사민주의학회(NDI,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와 국제공화당학회(IRI,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는 2003년 선거를 “매우 잘못된” 선거로 규정했다(NDI 2003). 특히, 언론에 대한 야당의 제한된 접근성과 지방 유권자들에 대한 협박을 지적하면서, IRI 선거감시단장은 2003년 총선거를 “국제기준에 맞는 자유, 공정 선거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Whitman 2003). 2012년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EAS에서 미 대통령 오바마는 인권과 자유공정 선거 문제를 양국관계 발전에 가장 중요한 장애물로 지적하면서 훈센과 대립하였다. 동시에 미 부안보보좌관 파워(Samantha Power)는 캄보디아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는 인권단체들에게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격려했다. 2013년 삼랑시가 훈센이 베트남에게 국토를 팔았다며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망명하게 되고 선거참여가 금지되었을 때, 미 국무부는 정치자유와 인권을 주장하면서 훈센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 결과 삼랑시는 사면되었고 선거에 참여하였다(Lum 2013). 2013년 선거 결과에 불복한 캄보디아민족구국당(CNRP, 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의 시위를 진압하고 활동을 금지하자, 미국은 캄보디아 선거관리위원회(NEC, National Election Committee)에 모든 부정, 불법선거를 투명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고, 삼랑시가 워싱턴에서

훈센 정권을 국제사회가 고립시킬 것을 요구할 때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압박하였다. 더구나, 당시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로의 회귀’가 가속화 되면서 미국과 베트남이 원자력 협정을 맺고, 베트남과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강경론자들은 친중 정책을 취하고 있는 훈센정권을 미국의 동남아시아 전략에 위협이 된다고 보았고, ‘체제 교체(regime change)’까지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했다.<sup>4)</sup> 반면에 중국은 선거 결과를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훈센을 지지하였다(Thul 2014; Wong 2013).

미국의 가치외교는 권위주의체제인 훈센정권의 체제정당성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캄보디아의 이미지와 위상을 손상시키고 원조 의존성이 높은 캄보디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어 국가 핵심이익인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훈센 개인의 통치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가치외교에 대해 훈센은 인권에 대한 재해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는 인권을 리광유(李光耀)의 ‘아시아 가치’로 정의한다. ‘공동체 권리,’ ‘사회질서,’ ‘안정,’ ‘경제적 권리’ 등을 일컫는다. 서양식 개념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캄보디아의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한 뒤에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지정학적, 안보적 측면에서는 미국은 캄보디아를 자국의 전략적 이해에 중요하고 협력의 공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9.11 사태 이후 미국의 최대 안보문제는 반테러, 대테러전이다. 캄보디아는 국경의 불확실성, 팽배한 부정부패, 낮은 수준의 법치로 테러리스트의 서식지가 되기 쉽다. 2003년 제마 이슬라미야 소속 4명이 프놈펜 미 대사관을 포함한 테러 공격 혐의로 체포되었다. 부시정부는 캄보디아와 군사협력관계를 맺고 소규모 특수부대를 프놈펜 미 대사관에

4) 칼 잭슨(Karl Jackson)은 캄보디아는 작은 국가라 미국이 심각히 생각하지 않았으나, 중국의 부상으로 갑자기 미국의 동남아시아 전략에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인터뷰 2016.01.22).



주둔시켰다(Thayer 2013). 그리고 10년 동안 계속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원조금지를 해제하였다. 또한 미군함이 시아누크빌 항구에 정박하여 인도주의 목적의 군사훈련을 하였다. 2010년 7월에는 미태평양사령부와 캄보디아군 공동 주관으로 캄보디아에서 연례 다자평화유지훈련인 ‘앙코르 센티넬(Angkor Sentinel)’이 실시되어, 총 26개국과 1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하지만 미국과의 대테러전 협력과 합동군사훈련은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중국 군사력 확대에 대한 직간접적인 균형전략이라기 보다는 캄보디아 국방력 양성이라는 국익에 부합하고 혼센의 체제정당성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중국 견제를 위한 균형전략이라면 2017년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경제원조에 대해 캄보디아가 앙코르 센티넬을 연기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미국과의 공식적인 군사동맹도 아직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Parameswaran 2017).

미국과 캄보디아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중국이다. 중국은 중화민족중흥을 기치로 삼고 있다. 또한 강대국들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해왔다. 공식적으로 신형대국관계는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을 벗어난 강대국들 간의 평화공존을 의미하나 실질적으로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핵심이익을 국제사회가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 상 지역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이다(주용식 2014; 2016).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은 지역패권을 위한 중국의 군사력 투사 능력과 의지에 대한 리트머스 테스트다. 또한 미국의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지전략적, 지경학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이다. 중국은 역사적 고유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당사국들과 양자관계로 해결하려는 반면, 미국은 아세안 차원에서 UNCLOS 등과 같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다자주의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캄보디아는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은 아니지만 미국의 동남아시아 전략적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중국은 인도차이나 반도 동과 서를 연결하는 일본과 미국의 동서횡단 회랑에 대해 운남성과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남북종단 회랑 구축으로 맞대응하면서 중화경제권을 동남아시아에 확산하고 있다. 남북종단 회랑의 남중국해 출로로 가장 중요한 요충지가 캄보디아의 시아누크 빌 항구이다. 따라서 미국의 동남아시아 대중국 봉쇄 전략에 있어서 캄보디아는 핵심지역이다.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표 2>와 같이 미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캄보디아의 주력 산업인 봉제산업의 생존과 성장에 있어서 미국과의 경제우호 관계는 필수적이다. 안보나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과 캄보디아는 상호보완과 협력의 공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와 미국이 긴장과 갈등의 관계를 가져가고 있는 것은 미국이 객관적 관점에서 캄보디아 국익에 대한 위협적 존재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의 가치외교가 훈센을 비롯한 엘리트 그룹의 체제정당성을 약화시키고 그들이 인식하는 국익(perceived national interest)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표 2> 캄보디아 무역 상대국(2015년, 단위: 백만달러)

무역상대국	수출	수입	총량
중국	43	4,035	4,462
독일	775	110	885
영국	894	32	926
미국	2,184	235	2,419
베트남	191	941	1,132

출처: ASEAN(2017)

## (2) 캄보디아와 중국과의 관계

캄보디아 내전 동안 중국은 친소 성향의 베트남을 견제하면서 크

메르 루즈를 지원 했다. 중국의 지원은 크메르 루즈의 저항이 장기화 되는데 공헌하였다. 훈센은 후에 ‘모든 악의 근원은 중국이었다’고 까지 베이징을 비난하였다(Chanda 1989: 26-43). 양국관계의 분기점은 1997년 쿠데타였다. 국제사회에서 궁지에 몰린 훈센은 중국카드를 활용하였다. 프놈펜 주재 타이완 연락사무소를 추방하였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베이징은 2백8십만 달러의 군사지원을 했고 1999년에는 1천8백3십만 달러 무상원조와 2억 달러 무이자 차관을 제공하였다. 당시 중국 해외원조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양국관계가 깊어진 가장 현실적인 요인은 중국의 ‘매력공세 (cham offensive)’다(Cho et al. 2008; Kurlantzick 2006). 2006년 원자바오 총리는 캄보디아에 6억 달러의 원조를 공식발표하였다. 2009년 시진핑 부주석의 캄보디아 방문 당시 12억 달러 무상원조와 차관을 공약하였다(Pang 2007). 중국의 캄보디아 경제원조는 양자, 다자형식으로 제공되었다. 2007년 캄보디아에 제공된 총 다자원조 6억8천7백만 달러 중 9천1백5십만 달러가 중국 원조였다(Lum 2008). 뿐만 아니라, 1992년부터 2012년까지 공공사업, 인프라 구축, 수력발전을 위해 연성차관과 무상원조 총 29억 달러를 지원했다. 2016년 10월 시진핑 주석의 프놈펜 방문 당시 중국은 2억3천7백만 달러 연성차관과 8천9백만 달러 빚채산을 포함한 31개의 협약을 맺었다(Thul 2016). 군사분야에 있어서도 중국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2013년 캄보디아는 1억9천5백만 달러의 중국 차관으로 12대의 하얼빈 Z-9 헬기를 구입하였고, 2014년에는 26대의 군수용 트럭과 30,000개의 군복을 지원받았다(Parameswaran 2015). 캄봉스푸에 캄보디아 보병학교 건설도 지원받았다. 2016년 시진핑 방문 당시 중국은 1천4백만 달러 군사지원을 약속했다. 중국이 캄보디아의 가장 중요한 경제 군사 후원자로 부상한 것이다(Dumbaugh 2008).

    중중 경제협력은 2006년 양국협력에 대한 포괄적 파트너십

(Comprehensive Partnership for Cooperation)이 체결되고, 2016년에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for Cooperation)으로 격상되면서 급물살을 탄다. 현재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투자국이다. 캄보디아에 투자한 중국회사는 3000여개 이상으로 예상되며, 주로 자원개발, 농업, 봉제, 건설, 관광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자원개발, 건설, 수력발전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주로 국영기업으로 중국의 개발도상국 산업개발 모델을 따른 것이다(Wang 2002). 양국 간에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1994년에서 2015년까지 중국은 총 543 프로젝트에 총 1백1억 달러를 투자했다(Sophavy 2015). <표 3>과 같이 2015년에만 중국 총투자액은 5억3천8백만 달러로 홍콩의 투자를 합하면 총 6억7천6백만 달러에 이른다. 중국은 또한 캄보디아의 최대 무역대상국으로 2015년 양자 무역 총액은 45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400여개가 넘는 캄보디아 수출품물에 면세혜택을 주고 있으며, 90% 이상이 농산물과 원자재다. 양국은 또한 경제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2006년 시아누크 빌에 무역경제협력지대를 설치하고 중국기업을 대거 유치해오고 있다(Hao 2008). 300여개의 회사가 8만개의 일자리와 20억 달러의 수출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된다(Time International Management Enterprises Company Limited 2008).

<표 3> 캄보디아 투자국(단위: 백만달러)

투자국	2012	2013	2014	2015
중국	368	287	554	538
홍콩	92	83	136	138
말레이시아	190	98	85	122
영국	93	116	47	111
미국	16	34	50	41
베트남	211	54	180	169

출처: ASEAN(2017)

중국의 경제지원과 무역, 투자는 훈센정권의 통치기반과 체제정당성 강화를 위한 경제성장과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외적자산이다. 우선 원조측면에 있어서 미국과는 달리 ‘묻지마 원조(hands-free)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원조제공 시에 원조금 사용내역서를 요구한다. 민간협력 형식으로 NGO에 직접 제공되는 경우도 많다. 중국은 원조 대부분을 캄보디아 정부에 직접 줄 뿐만 아니라 사용내역서나 사업보고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Var 2016). 훈센은 중국 무상원조에 대해 “[여러 우방들 가운데] 평화공존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있는 중국은 지속적으로 캄보디아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참견하지 않는다”고 답례한 적이 있다(Marks 2000: 92-108). “중국은 말은 적고 하는 것은 많다”며 무조건 원조에 대해 공공연히 찬사를 보냈다(Var 2016). 중국의 무조건 원조는 베이징 컨센서스의 행동규칙이다. 미국 개발모델인 워싱턴 컨센서스가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제, 민주주의(선정)를 반영한 개발 패러다임인 반면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 개발모델의 투영이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개발국가형(developmental state)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권위주의 체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베이징 컨센서스는 ‘적권(red rights)’ 혹은 ‘제2세대 인권’이라고 불리는 의식주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필요 충족을 강조한다. 따라서, 국가간 역사, 문화, 경제 발전의 상이성을 지적하면서 서구식 민주주의와 인권 개념의 보편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두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개발모델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Cho et al. 2008). 대부분이 권위주의 체제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베이징 컨센서스가 워싱턴 컨센서스보다 더 수용성이 높다. 흔히, 워싱턴 컨센서스는 제국주의 패러다임으로 베이징 컨센서스는 ‘원-원’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중국의 인프라 구축 원조는 훈센과 CPP에 매우 실효적인 정치 자산이 되고 있다. 캄

보디아 경제사회발전의 시작은 인프라 구축이다. 도로, 교량 건설은 국가경제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이다. 캄보디아의 경우 인프라 구축은 국제기구와 같은 다자원조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원조조건으로 인해 효과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다. 중국의 인프라 구축 지원은 부족한 예산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Middleton 2008). 가시적 인프라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중국의 지원은 CPP의 지지도를 높이는데 공헌하고 있다.

중국 무역, 투자 역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으로 훈센의 통치기반과 체제정당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봉제산업의 경우 3000여개 이상의 회사가 1995년 이후부터 캄보디아 총 수출액의 80%, GDP의 2%를 차지하고 있고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중국은 캄보디아 봉제산업 최대 해외 투자자다(Var 2016). 봉제산업의 성장은 농촌 생활수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촌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되는 공장 근로노동자들의 수입은 농업생산성을 높이는데 투자되고 있다.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수력발전소는 캄보디아 경제개발에 필수다. 해외 투자자들은 불안정한 전력공급을 투자장애 요인으로 들고 있다. 2011년 캄보디아 총가구의 31%만이 전력공급이 안정적으로 되었다. 정부는 2030년까지 70%로 높일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력발전소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의 수력발전 투자는 캄보디아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훈센의 통치기반을 강화하고 체제정당성을 높이는 정치자산이 될 것은 자명하다.

무조건 원조와 막대한 투자로 중국은 캄보디아로부터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이익을 확보해오고 있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 농산물과 원자재를 수입하고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공산품을 수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미국 달러화

를 사실상 공용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부를 달리로 축적하고 싶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캄보디아가 투자 적지 중 하나다. 더구나 캄보디아는 지속적으로 6% 이상의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어 투자기회를 창출하기가 용이하고, 중국계 캄보디아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즈니스하기가 용이하다. 전략적으로 캄보디아는 중국의 종단 경제회랑의 남중국 출구이다. 시아누크빌 항구는 중국의 해양 수송, 통신, 에너지 운송망의 시작인 ‘진주 목걸이(string of pearls)’의 시작이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재균형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아누크빌 항구는 그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최근 항만확장을 지원해오고 있다.

중국의 경제지원에 대해 캄보디아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장을 일관성있게 지지해오고 있다.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파룬궁 종교단체를 금지했으며, 1999년 베오그라드 중국 대사관 오폭사건, 2001년 미중 항공기 충돌 사건 시 중국 편에 섰다. 남중국해 분쟁의 경우에도 캄보디아는 중국의 입장에서 접근해왔다. 아세안 방식인 ‘협의를 통한 합의’ 원칙을 감안할 때 캄보디아의 목소리가 중국에게는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다. 2012년 캄보디아는 의장국으로서 아세안정상회의와 외무장관회담, 아세안+3와 EAS 등을 주최하였다. 3월 후진타오 주석의 프놈펜 방문 시 훈센에게 남중국해 문제를 너무 빨리 밀어붙이지 않기를 요청했고, 양정상은 이 문제를 국제화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양국간 무역을 2017년까지 2배로 증가시키기로 했다. 캄보디아는 의장국 자격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아세안정상회의 의제에서 삭제하였고, 외무장관회담에서는 본 이슈에 대해 언급조차 못하게 해 최초로 공동성명이 공개되지 않았다. 그 대가로 훈센은 9월 방중 시 중국으로부터의 약 4억2천만 달러의 차관을 얻어냈다. 11월 캄보디아가 주최한 중국-아세안, 아세안+3, EAS에서 훈센은 공개적으로 남중국해 문제가 국제화되는데 동

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2016년 비엔티안 아시아정상회의에서 캄보디아는 중국의 주장을 반대하는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지지하는 아세안 성명을 비토했고, 시진핑 주석의 프놈펜 방문시 공동성명에서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중국은 또한 지문화적인(geo-cultural) 입장에서 동남아시아에 접근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중국의 문화가 가장 빠르게 전파되고 확산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중국정부는 중국어 학원 건설, 중국어 교재 개발, 중국어 수강학생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중국계 캄보디아 사회와의 관계를 깊게 가져오고 있다. 특히 공자학원을 중심으로 중국어와 중국문화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Cho et al. 2008). 중국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클린턴(Hillary Clinton) 전 미국무장관은 캄보디아는 여러 국가들과 친교를 맺는 것이 현명하며, “어느 특정 한 국가에 의존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중국 의존성에 대해 경고했지만, 캄보디아 지배층은 중국의 영향력을 중화제국주의 침투로 보기보다는 ‘윈-윈’게임으로 보고 있다.

중국 영향력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무역적자, 캄보디아 노동자들에 대한 비인륜적 대우, 원조와 투자 불투명성 등이다. 특히, 중국 투자는 농업 산업화, 광물, 석유 등 전략산업에 치중되어 있어 자원 광잉개발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구나 중국계 캄보디아 비즈니스 사회와 연계되어 뒷거래 등 불공정 거래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투자와 중국계 비즈니스 연계는 훈센과 엘리트들의 중요한 정치자금원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반정부 지도자 삼랑시는 중국의 경제원조와 투자는 부패한 관료와 부주의한 투자자가 승리하고 캄보디아 대중이 지는 ‘윈-윈-루즈(win-win-lose)’ 게임이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난은 오히려 중국지원이 훈센의 통치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G-2 체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글로벌 구조, 아세안 지역주의, 캄보디아 국익과 엘리트의 정치적 이해 4 가지 수준에서 현실구성주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캄보디아의 내전이 종결되는 시점은 구소련이 몰락하고 냉전이 종식되는 시기였다. 미국 단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훈센은 친미 헤징 전략을 택했다. 베트남의 후견인인 소련이 없어졌고, 중국은 아직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상황이었다. 훈센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용을 선언하고 1993년 미국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였다. 하지만 1997년 훈센의 쿠데타 이후 미국과 서방세계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우며 훈센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훈센은 친중 헤징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세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국이 동아시아의 맹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힘의 역학관계의 변화에 편승하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로는 경제실용주의다. 1992년부터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원조가 본격화 되었다. 셋째로는 미국의 가치외교다. 미국의 원조는 민주주의, 인권, 자유시장경제라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조건화되어있다. 다시 말하면, 훈센의 권위주의적 통치기반을 인정하지 않고 체제정당성에 위협이 되었다. 중국의 원조는 그와 같은 조건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중국식 모델은 권위주의 체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훈센의 통치기반과 체제정당성을 강화해 주었다. 캄보디아 경제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는 중국의 막대한 원조와 투자는 훈센에게 매우 중요한 정치자산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힘의 역학관계의 변화와 경제적 이익이라는 현실주의적인 유인 요인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구성주의적 위협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훈센이 친중 헤징전략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2016년 말 캄보디아와 중국은 ‘골든 드라곤(Golden Dragon)’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7년 캄보디아는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연기하였다(Parameswaran 2017). 하지만 이러한 훈센의 친중 전략은 미국으로 부터의 위협 요인을 간접적으로 견제하고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제한편승을 통한 헤징 전략이지, 중국과의 동맹으로 미국을 견제하는 균형전략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캄보디아의 기본전략은 강대국 모두와 친선관계를 맺겠다는 것이다.<sup>5)</sup> 향후, 훈센은 보다 더 친중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대일로포럼’에 참석한 훈센은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고, 중국은 약 2억1천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원조를 약속하였다. 캄보디아는 일대일로 동남아시아 루트의 핵심국가 중 하나다. 라오스의 보텐, 비엔티안을 거쳐 태국의 방콕 그리고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이르는 중단경제회랑은 중국 운남성과 남중국해를 연결하면서 ‘일대’와 ‘일로’를 잇는 중심축이다.<sup>6)</sup> 따라서 중국의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 및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간의 경제, 안보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석수. 2016. “남중국해 분쟁 해결과 아세안 방식(ASEAN Way).” 『세계지역연구논총』 34(1): 29-49.
- 변창구. 2009. “아세안 방식과 동남아시아 안보: 성과와 과제.” 『대한정치학회보』 17(2): 165-185.

5) 훈마니 (Hun Many) 국회의무의원 인터뷰(2017.03.21).

6) 태국 CP 그룹 일대일로 담당 부회장 인터뷰(2017.05.07).

- 이윤범. 2012. “캄보디아 훈센의 외교 전략과 전망.” 『동남아연구』 21(3): 100-132.
- 주용식. 2014. “중국 패권주의와 신형 대국관계.” 『신아세아』 21(1): 27-49.
- \_\_\_\_\_. 2016. “G-2 갈등구조와 동남아시아.” 『신아세아』 23(4): 103-129.
- Acharya, Amitav. 2000. “The Quest for Identity of Southeast Asia Nation: Security Community or Defense Community.” *Pacific Affairs* 64(2): 159-178.
- \_\_\_\_\_. 2014. *Constructing a Security Community in Southeast Asia: ASEAN and the Problem of a Regional Order* (3rd edition). London: Routledge.
- Adler, Emanuel and Michael Barnett (eds.). 1998. *Security Commun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SEAN. 2017. *ASEAN Statistics*. <http://asean.org/resource/statistics/> (검색일: 2017.06.03)
- Barkins, J. Samuel. 2004. *Realist Constructivism: Rethinking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zezinski, Zbigniew. 1997.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Imperatives*. New York: Basic Books.
- Busse, Nikolas. 1999. “Constructivism and Southeast Asia Security.” *The Pacific Review* 12(1): 39-60.
- Carr, E. H. 1964.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ranational Relations*. New York: Harper and Row.

- Chanda, N. 1989. "Civil War in Cambodia?" *Foreign Affairs* 76 (Fall): 26-43.
- Chandler, David. 2007. *A History of Cambodia* (4th edition). Boulder: Westview Press.
- Cho, Young Nam. and Jong Ho Jeong. 2008. "China's Soft Power." *Asian Survey* 48(3): 453-472.
- David, Steven. 1991. *Choosing Sides: Alignment and Realignment in the Third World*.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Dumbaugh, Kerry. 2008. "China's Foreign Policy: What Does It Mean for U.S. Global Interest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ly 18.
- Fiori, A. and A. Passeri. 2013. "Hedging in Search of a New Age of Non-Alignment: Myanmar between China and US." *SISP Conference* September 12-4.
- Goh, Evelyn. 2007. "Southeast Asian Perspectives on the China Challeng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30(4): 809-832.
- Gottesman, Evan. 2003. *Cambodia After the Khmer Rouge: Inside the Politics of Nation Buildin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ao, H. 2008. "China's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with CLMV." Sotharith, C. (ed.), *Development Strategy for CLMV in the Age of Economic Integration. ERIA Research Project Report 2007-4*. Chiba: IDE-JETRO. 171-208.
- He, Kai. 2008. "Institutional Balancing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Balance of Power Strategies in Southeast Asia."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4(3): 489-518.

- Jackson, Patrick and Daniel Nexon. 2004. "Constructivist Realism or Realist-Constructivism?"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6: 337-341.
- Jones, Lee. 2007. "ASEAN Intervention in Cambodia: From Cold War to Conditionality." *The Pacific View* 20(4): 523-550.
- Kuik, Cheng-Chwee. 2008. "The Essence of Hedging: Malaysia and Singapore's Response to a Rising China." *Contemporary Southeast Asia* 30(2): 159-183.
- Kurlantzick, J. 2006 "China's Charm Offensive in Southeast Asia." *Current History* 105(692): 270-276.
- Leifer, Michael. 1989. *ASEAN and the Security of Southeast Asia*. London: Routledge.
- \_\_\_\_\_. 1996. *The ASEAN Regional Forum, Adelphia Paper 30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um, T, Morrison W, and Vaughn B. "China's 'Soft Power' in Southeast Asia." *CRS Report for Congress* June 2008.
- Marks, Paul. 2000. "China's Cambodia Strategy." *Parameters* 30(3): 92-108.
- Middleton, C. 2008. *Cambodia's Hydropower Development and China's Involvement*. Berkeley: International Rivers
- Morgenthau, Hans. 1946. *Scientific Man Versus Power Poli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ussomeli, Joseph. 2010. "The Role of the U.S. in the Democratic 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of Cambodia (During My Tenure in Cambodia)." *Academic Symposium Examines U.S.-Cambodia Relationship* July 21-22.
-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2003. *Statement of the NDI-Pre-*

- election Delegation to Cambodia's 2003 National Assembly Elections*. Phnom Penh June 5.
- Pang, Zhongying. 2007. "China's Soft Power." *Brooking Institution, Center for Northeast Asian Policy Studies*.
- Parameswaran, Prashanth. 2017. "Why Did Cambodia Just Cut US Military Drills?" *The Diplomat* January 18.
- Peou, Sorpong. 2002. "Realism and Constructivism in Southeast Asian Security Studies Today: A Review Essay." *The Pacific Review* 15(1): 119-138.
- Roy, Denny. 2005. "Southeast Asia and China: Balancing or Bandwagoning?" *Contemporary Southeast Asia: 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Strategic Affairs* 27(2): 305-322.
- Schweller, Randall L. 1994.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19(1): 72-107.
- Sophavy, S. 2015, "Chinese Companies Invest a Total of US\$ 10,1 Billion in Cambodia." *Agence Kampuchea Presse*.
- Suryadinata, Loo. 1985. *China and the ASEAN States: The Ethnic Chinese Dimension*. Singapore: Marshall Cavendish Academic.
- Thayer, Carlyle. 2013. "The Tug of War over Cambodia." *USNI* February 19.
- Thul, Prak Chan. 2016.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Visits Loyal Friend Cambodia." *Reuters* October 13.
- Time International Management Enterprises. 2008. "Cambodia-China/ Infrastructure Development: SEZ Foundation Laid in Sihanoukville." *ASEAN Affairs* February 26.

- US Embassy in Cambodia. 2010. *60th Anniversary of US-Cambodia Diplomatic Relationship*. Phnom Penh: US Embassy.
- Var, Veasan. 2016. "China's Influence in Cambodia." *Khmer Times* June 29.
- Walt, Stephen. 1987. *The Origin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Wang, Yaolin. 2002. "The Motivations behind China's Government-Initiated Industrial Investments Overseas." *Pacific Affairs* 75(2): 187-206.
- Wendt, Alexander.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atherbee, Donald. 2015. *International Relations in Southeast Asia: The Struggle for Autonomy*.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 Whitman, Christine T. 2003. "The Election Cambodia Deserves." *The Washington Post* August 8. <http://www.iri.org/resource/washingtonpost-features-commentary-leader-iris-observer-delegation-cambodia> (검색일: 2017.06.03)

(2017.07.31. 투고, 2017.08.14. 심사, 2017.08.16. 게재확정)

<국문초록>

## G-2 체제에 대한 캄보디아의 대응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주 용 식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G-2 역학 관계에 주의 깊게 대응하면서 각자의 국가이익을 위해 외교의 묘수 (art of diplomacy)를 찾고 있다. 캄보디아는 친중 해징 전략으로 G-2 체제에 대응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냉전종식 이후 친미 성향을 보였던 훈센의 정책이 친중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를 G-2 체제의 부상, 아세안 지역주의, 국가이익, 훈센의 통치기반과 체제정당성 차원에서 분석해 본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현실구성주의 시각에서 힘의 정치와 규범적 요인들이 훈센의 정치적 입지와 대외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본다. 중국과 캄보디아는 경제 상호의존성과 중국의 힘의 상승이라는 현실주의 요인과 규범적 차원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수렴되면서 관계가 긴밀해져왔다. 더구나 중국의 막대한 경제원조와 투자는 훈센의 통치기반과 체제정당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반면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세운 미국의 가치외교는 훈센의 권력기반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면서 양국은 긴장과 갈등의 관계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훈센의 친중전략은 미국의 가치외교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해징 전략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헤게모니를 인정하고 중국의 지배



를 인정하는 미국에 대한 균형전략은 아니다. 아세안의 경우 강대국들의 힘의 정치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미중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캄보디아는 국익에 따라 아세안의 조정역할 보다는 양자관계로 G-2 체제에 대응하고 있다.

**주제어:** 캄보디아, 현실구성주의, 헤징전략, 훈센, G-2와 동남아시아

<Abstract>

## Cambodia's Response to the G-2 System: A Theoretical Perspective

CHOO Young Shik  
(Chungang University)

Due to their geographic proximity to Beijing, the Southeast Asian states under the fallout of the China's growing power are struggling to seek the art of diplomacy to promote their national interests. This study explores why Cambodia previously taking a pro-US strategy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has switched to a pro-China one in the context of the rise of G-2 system, the ASEAN regionalism, the country's national interest and Hun Sen's regime legitimation. Theoretically, this study takes a realist constructivist approach and tries to find how realist interests and norms have affected the Hun Sen's regime legitim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Cambodia has been deepened by mutual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increasingly stronger Chinese power. Especially, the Chinese massive economic aids and investment have enormously supported the regime legitimation of Hun Sen. On the other hand, The US value diplomacy promot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has undermined the Hun Sen's legitimacy and strained the two nations' relationship.

However, the Hun Sen's pro-China strategy is not to check and balance against US strategic interests and not to recognize the Chinese hegemonic position in Southeast Asia. It is a hedging against the US value diplomacy while maximizing economic and other gains from China. ASEAN has been playing a coordinating role to limit the scope of power politics among big powers and to mitigate its ramifications. Yet, since the US and Chinese interests are so keenly criss-crossing, Cambodia may continue to react to the G-2 system through bilateral relations with them.

**Key Words:** Cambodia, Realist Constructivism, Hedging Strategy, Hun Sen, G-2 and Southeast Asia.